

Current Issues of the Chinese Economy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11년 4월 13일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강요(초안) 2: 총 16편 중 제7~8편

문의처: KIEP 북경사무소 (hj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목차

- 제1편 방식전환: 과학적 발전의 새로운 국면 개척
- 제2편 강농혜농(强農惠農):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가속화
- 제3편 전환과 고도화: 산업의 핵심 경쟁력 제고
- 제4편 환경 조성: 서비스 산업의 대대적 발전 추진
- 제5편 패턴 최적화: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도시화의 건전한 발전 촉진
- 제6편 녹색발전: 자원절약형과 환경 친화형 사회 건설
- 제7편 혁신 촉진: 과학교육 흥국(興國) 전략과 인재강국 전략 실시
- 제8편 민생 개선: 기본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과 완비
- 제9편 지엽과 근본 함께 관리: 사회관리 강화와 혁신
- 제10편 계승과 혁신: 문화의 발전과 번영을 추진
- 제11편 개혁과 난관 극복: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비
- 제12편 호혜 공영: 대외개방 수준 향상
- 제13편 민주 발전: 사회주의 정치문명 건설 추진
- 제14편 협력 심화: 중화민족의 공동 가원(家園) 건설
- 제15편 군민 융합: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건설 강화
- 제16편 실시 강화: 웅대한 청사진 실현

※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강요 초안(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綱要 草案) 전문 번역을 6차례에 걸쳐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으로 게재함. 본 번역문은 연구를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되는 것이며 번역상 오류에 대해 본 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음.

제7편 혁신 촉진: 과학교육 흥국(興國) 전략과 인재강국 전략 실시

전면적으로 국가의 중장기 과학기술, 교육, 인재 관련 계획의 구체화와 과학기술 혁신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교육개혁의 신속한 발전과 인력자원의 우위 발휘로 혁신국가 건설을 추진한다.

제27장 과학기술 혁신능력의 강화

자주혁신, 중점적 도약(重点跨越), 발전고수(支撑发展), 미래선도(引领未来) 방침을 견지하고 신속하게 국가적 혁신 시스템을 건설하며, 기업의 혁신능력 제고에 주력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실질적 생산력으로 전환을 촉진하여 과학기술 혁신이 경제발전을 더욱 뒷받침하도록 한다.

제1절 중대 과학기술의 목표 추진

과학기술발전의 추세를 포착하고 현재 수준 이상의 기초연구와 첨단기술연구를 배치하여 중대한 과학적 발견과 새로운 학문분야를 촉진하고 물질과학, 생명과학, 공간과학, 지구과학, 나노과학 등 영역에서 미래과학기술 경쟁의 감제고지를 점유한다. 과학기술의 진보와 산업 업그레이드, 민생개선의 긴밀한 결합을 촉진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중대한 수요에 직면하여 현대농업, 장비제조, 생태환경보호, 에너지자원, 네트워크 정보, 신형재료(新型材料), 공공안전, 건강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목표점을 조성한다. 국가의 중대한 과학기술 전문항목을 빠르게 실시하여 공생과 핵심기술의 혁신능력을 강화한다.

제2절 기업을 주체로 한 기술혁신 체계의 빠른 건설

과학기술 체계의 개혁심화로 전(全) 사회과학기술자원의 높은 효율적 배치와 종합적인 집적효과를 촉진한다. 중점적으로 혁신적 요소가 기업으로 집결되도록 유도하고,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학기술지원 지원 역량을 확대하여 기업을 주체로 하고, 시장적 발전, 산학연(产学研)의 결합적 기술혁신 체계를 빠르게 건설하여 기업이 연구개발 투입, 기술적 혁신 활동, 혁신성과를 응용하는 주체가 되도록 한다. 과학연구원과 대학교의 혁신적 동력을 강화하여 대형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격려하고 중소형 기업의 혁신적 활동을 이끌어 기업·과학연구원·대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창조적 전략연맹의 설립을 추진하고 기업가와 과학기술의 지도자적 인재가 과학기술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 군인과 국민의 과학기술 자원융합을 강화하여 과학기술의 중개서비스 발전을 격려하고 서비스 산업 기업능력을 제고한다. 국가의 혁신도시, 자주적 혁신시범구, 첨단기술 산업개발지구의 선도적 방사 역할을 집결하여 몇몇 혁신적 중심지역 형성을 촉진하고 북경 중관촌(中关村)을 점차적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지닌 혁신적 과학기술 중심지역이 되게 한다.

제3절 과학기술의 기초설비 건설

원천기술, 집적 혁신효과와 좋은 기술의 유입·습득·재혁신을 강화하는 기준에서 기초적이고 최첨단적인 기술과 공통 기술연구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여 국가의 중대한 과학기술 기초설비를 건설 및 개선하고 상호적인 조합, 개방공유, 고효율적 이용을 강화한다. 중점 학문과 전략적 첨단기술영역을 국가과학센터와 국가(중점) 연구실로 새롭게 건설하고 국가과학기술 기초조건의 플랫폼을 구축한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의 기술영역에 국가 프로젝트 연구실을 건설하고 국가프로젝트센터(国家工程中心)의 건설구도를 최적화한다. 기업의 기술 중심적 건설을 강화하고 기술개발과 기술혁신서비스의 플랫폼 건설을 지원한다. 전 국민적 과학적 소양의 실행계획을 심화·실시하고 과학이 보급된 기초설비 보급과 대중의 과학적 보편화를 강화한다.

제4절 과학기술 혁신의 지원정책 강화

기업의 혁신과 과학연구성과 산업화의 재정·세무·금융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재정적으로 과학기술 비용투입에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정부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며 과학연구 비용의 관리제도 개혁을 심화한다. 전면적인 기업연구비용의 합계공제(加

표 1. 과학기술 혁신능력 건설의 주요 내용

01 중대한 과학기술 항목

핵심전자부품, 통용되는 첨단마이크로칩 및 기초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큰 규모의 회로 제조기술 및 가공라인, 신세대 무선 광대역 이동통신, 고급공작기계와 기초제조기술, 대형 석유가스전 및 석탄층 메탄가스 개발, 선진적 대형가압수형원자로, 수자원의 오염통제와 처리, 유전자이식 유기체의 신(新) 모델 배양, 새로운 약(药)의 제조, 에이즈와 바이러스성간염 등 중대 전염병 예방치료, 대형비행기, 고해상도의 대지관찰 시스템(高分辨率对地观测系统), 유인우주비행과 달 탐사 프로젝트 등을 집중한다.

02 중점 과학기술 계획

중점적인 기초연구발전계획(973계획), 첨단기술연구발전계획(863계획), 과학기술지원계획과 국가자연과학기금을 실시하고, 단백질, 양자(quantum) 조정제어, 나노, 발육과 생식 등 중대한 과학연구계획을 실시한다.

03 과학연구시설

자유전자 레이저, 파쇄 중성자원(Spallation Neutron Source) 등 국가 중대 과학기술의 기초설비를 건설한다.

04 지식혁신 개발프로젝트

응집물질물리(condensed matter physics), 수학과 복잡한 시스템, 지구와 환경, 공간과 해양 등 과학을 중심으로 건설하고 청정자원과 그린 Intelligent Manufacturing, 소위성(minisatellite) 및 공간지각, 대륙 및 해양의 심층탐사기술 연구개발 기지를 건설한다.

05 기술혁신 프로젝트

신에너지 자동차, 탄소섬유 복합소재, 디지털 가정 네트워크 등 국가 프로젝트 중심과 프로젝트 실험실을 건설하고 기업 기술센터, 혁신적 기업과 산업기술의 혁신적 전략연맹을 강화하고 자주 혁신적 100대 기업을 배양한다.

扣除¹⁾ 등 기술진보를 촉진하는 세수 우대정책을 실시한다. 지적재산권의 저당²⁾ 등을 실시하고 혁신적인 금융정책을 격려한다. 견고한 기술재산권의 교역시장을 설립한다. 지적재산권 전략을 실시하고 지적재산권 법률제도를 개선하며 지적재산권의 혁신, 운영,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고 법의 집행강도를 강화한다.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의 기술표준을 채택하고 보급하는 것을 격려한다. 과학기술 성과평가의 장려 제도를 개선하고 과학연구의 신용건설을 강화한다.

제28장 교육개혁의 신속한 발전

당의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법에 의거하여 국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한다. 우선발전·육인위본·혁신 개혁·공평 촉진·질적 제고의 요구에 맞춰 교육사업·과학발전을 추진하고 교육의 현대화 수준을 제고한다.

제1절 각종 교육의 전면적인 발전

적극적으로 유아교육을 발전시키고 학교입학 1년 이전의 유치원입학률(毛入园率³⁾)을 85%까지 높이도록 한다. 9년 의무교육의 보급성과를 견고하게 하고 전면적인 질과 수준을 향상한다. 기본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보편화하고 보통 고등교육의 다양한 발전을 추진한다. 농촌의 직업교육을 빠르게 발전시키고자 한다. 전면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세계 일류대학, 높은 수준의 대학, 중요 학과를 빠르게 건설하여 응용성·복합성·기능성과 인재배양 규모를 확대한다. 민족교육의 발전을 중시하고 지원하여 '두 종류의 언어 교육'을 추진한다.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 교육의 지속적인 빠른 발전과 모든 사람이 공부하고 또 평생 공부하는 학습형 사회를 건설한다.

제2절 공평한 교육의 추진

공공 교육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농촌과 변두리 지역, 빈곤지역, 민족지역에 집중적으로 치중하여 교육 격차를 빠르게 감소시킨다. 의무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학교의 배치를 전면적으로 계획하여 의무교육학교의 표준화 건설을 추진한다. 현·시(县·

1) 세법규정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금액에서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소득세 과세 시 금액을 공제해 주는 일종의 세수우대조치이다. 예를 들어 세법규정에서 연구개발비용의 50%에 합계공제정책을 실시하면 기업의 당해 연도 개발비용이 실질적으로 100위안을 지출하였을 때 연구개발의 격려정책은 150위안(100*150%)의 금액을 세전에 공제해준다(역자 주).

2)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지적재산권의 가격 책정을 거쳐 은행 등 융자기구에서 자금을 받을 수 있고, 기간 내에 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일종의 융자행위이다(역자 주).

3) 만 3세에서 만 6세 이하의 아이들은 국가 혹은 민간이 창립한 기관에서 공부하기 이전에 유치원에서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중국의 교육부문은 유치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 수를 호적상의 3세에서 6세의 적령기 아이들 총 수로 나누어 유치원 입학률(毛入园率)을 구한다(역자 주).

市) 지역 내에 도시와 농촌 초중학교 선생님의 배치와 임금 및 교장과의 교류제도에 있어 통일적인 표준으로 대우한다. 의무교육단계에서 중점학교와 중점반을 없애도록 한다. 새로이 증가되는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모집계획은 중서부지역에 치중되도록 하고, 동부지역 고등교육기관의 중서부지역 신입생 모집규모를 확대한다. 특수교육학교의 경영조건을 개선하고 장애학우의 고등학교 과정은 점차적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국가의 재정지원 제도를 완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이 학업을 완성하도록 도움을 준다.

제3절 인성교육의 전면적 실시

교육과 학생의 심신발전 규율에 따라 정치사상·도덕교육의 우선과 능력중시를 견지하며, 교학(敎學)내용, 방법과 평가 제도를 혁신하고 학생의 사상과 품행·문화와 과학수준·신체적 소질·심미능력의 발전을 촉진한다. 국가의무교육의 질적 기본표준과 감시제도를 건립하여 초중학교 학생의 수업부담을 적절하게 줄여나간다. 전면적으로 고등학업수준시험(高中學業水平考試)과 종합적 인성평가를 실시하여 시험에 초점을 맞춘 교육 문제를 해결한다. 공학(工學)과의 결합, 학교와 기업의 협력, 학생실습의 직업교육 배양패턴을 실행하여 학생이 취업할 수 있는 기능과 재능을 향상시킨다. 전면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의 학부교육 수준과 교학에 개혁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학수준의 보장체계를 견고히 한다. 연구생의 배양 체제를 개선한다. 교사의 자질을 엄격하게 검증하고 교육자로서 덕과 태도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교장과 교사의 전문화 수준을 높여서 우수한 인재를 격려하며 교육에 종사하도록 한다.

제4절 교육체제 개혁의 심화

시험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점차적으로 분야별 시험, 종합평가, 다양한 합격제도(多元錄取)를 형성한다. 현대적 학교제도를 더욱 빠르게 건설하고 정부와 학교의 분리를 추진하며 부문간 구체적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분업을 추진한다. 학교 설립의 자주권을 실시하고 확대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성(省) 정부의 교육에 대한 전면적 계획을 강화한다. 사회적인 역량을 격려하고 인도하여 교육을 발전시키고 민영학교와 국립학교 간의 평등적 법률지위를 실현하고 학교설립의 질서를 규범화한다. 교육개방을 확대하고 국제교류협력의 강화와 우수한 교육자원을 유입시키도록 한다. 정부의 투자를 주체로 하여 많은 경로에서 경비를 조달하는 체제를 완비하고 2012년 재정성 교육경비지출이 국내 GDP 총액의 4%에 달하도록 한다.

표 2. 교육발전의 중점 프로젝트

01 의무교육 학교의 표준화 건설

의무교육단계가 취약한 학교를 개조하고, 도시와 농촌 초중학교의 숙소, 교사의 자질, 설비, 도서, 체육관 등이 기본적으로 표준에 도달하도록 한다.

02 의무교육의 교사단체 설립

농촌지역 의무교육학교의 교사 특설근무 계획을 실시하고, 교사 전원 훈련을 강화하며, 농촌학교의 취약한 과목의 교사들을 강화한다. 변두리 취약한 지역의 교사에게 숙소를 제공한다.

03 농촌의 유아교육 추진

중점적으로 중서부 빈곤지역의 유치원 건설을 지원하고, 기본적으로 취학 전 1년 교육을 보급한다.

04 직업교육의 기초능력 건설

직업교육 실시·훈련 기지와 중고등 직업교육 시범학교 건설을 지원하고 복합형 교사(双师型)⁴⁾단체의 설립을 강화한다.

05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985 프로젝트’와 ‘211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중서부 고등교육 진흥 계획을 실시한다.

06 민족교육발전

변경의 현(县)과 민족자치구 지방의 빈곤한 현(县)의 고등학교 건설을 지원한다. 소수민족지역에 두 종류의 언어가 가능한 교사 양성을 강화한다.

07 특수교육학교 건설

일련의 특수교육학교 신설 및 개조·확장하여 건설하고, 가르치는 데 필요한 설비와 건강회복 훈련설비를 배치한다.

08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에 대한 자금지원

소수민족지역, 빈곤지역 농촌 초등학교 학생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농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숙 사생의 생활적 보조표준을 높여 학자금 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09 교육정보화 건설

농촌학교 정보기초설비의 건설을 지원하고 국가 디지털 교육 사이트와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건설한다.

10 교육의 국제교류 협력

중국으로의 유학계획을 실시한다. 시범적으로 중국과 해외의 학교와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학교를 설립한다. 해외에 학교 설립을 유도한다. 공자학원 건설을 지원한다.

제29장 높은 수준의 인재집단의 대대적 육성

인재강국전략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서비스 발전·인재우선·이용위본(以用为本)·혁신적 메커니즘, 첨단적 선도, 전체적 개발이라는 지도방침을 견지하고, 현대화 건설수요의 여러 인재집단 건설을 강화하여 경제발전방식의 빠른 전환과 과학발전을 실현하는 데 인재 보증을 제공한다.

4) 복수형 교사는 교육에서 교학능력과 직업에서 실무적인 경험도 가지고 있는 복합적 인재로 직업교육의 수준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역자 주).

제1절 혁신형 과학기술인재의 배양과 창조

과학기술 혁신능력의 제고와 혁신적 국가건설을 기준으로 높은 수준의 혁신적 과학기술인재를 중심으로 세계 수준의 과학자와 과학기술의 지도자적 인재, 엔지니어와 높은 수준의 혁신단체를 육성한다. 교육방식을 혁신하고 학생의 과학정신과 혁신적 사고, 능력을 더욱 배양한다. 실천적인 배양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 중대과학연구 과제와 프로젝트, 중점학과와 과학연구기지, 국제학술 교류협력 과제에 의거하여 높은 수준의 혁신적 과학기술인재 양성기지를 건설한다. 일선의 혁신적 인재와 청년과학기술 인재를 중점적으로 배양한다. 해외 높은 수준의 혁신적 창업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입한다.

제2절 각 분야 인재집단의 협조적 발전 촉진

전문적 인재는 장비제조, 생물기술, 신소재, 우주비행, 국제비즈니스, 에너지자원, 농업기술 등의 경제영역과 교육, 문화, 정치·법률, 의학·보건 등 사회영역에서 시급히 필요하지만 그 수가 부족하므로 전문적 인재를 크게 개발하여 정당과 정부, 기업경영관리, 전문기술, 고기능, 농촌실용, 사회공작 등 모든 분야에서 인재집단 구축에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하여 충분한 인재 수, 합리적 구조, 전면적인 소질과 혁신능력 향상을 실현하고 경제사회발전 인재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한다.

제3절 우수한 인재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환경 조성

정당은 인재관리의 원칙을 고수하며 견고한 정부의 거시적 관리, 시장의 유효한 배치, 단위(单位)의 자주적 고용, 인재의 자주적 직업선택의 메커니즘을 건립한다. 인재의 업무목표책임제를 설립한다. 인재관리부문의 직능전환을 추진하고 행정행위를 규범화하여 단위(单位)에서 고용을 하는 데 자주권을 확대하고 구체화한다. 국유기업과 사업단위의 인사제도개혁을 심화한다. 인재관리체제와 인재배양개발, 평가발전, 선발임용, 유동적인 배치와 보장체제를 유도하고 인재존중, 우수한 인재가 두각을 보이는 데 유리하고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다. 인재서비스와 관리방식을 개선하고 국가의 중대한 인재정책을 실현하며, 중대한 인재 프로젝트를 관장하고, 인재사업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한다.

표 3. 중대한 인재 프로젝트

-
- (1) 인재혁신·계획추진, (2) 청년영재의 개발계획, (3) 기업경영관리 인재의 소질 향상 프로젝트, (4) 높은 인성교육의 인재육성 프로젝트, (5) 문화적 명가(名家) 프로젝트, (6) 모든 사람이 건강한 인재보장 프로젝트, (7) 해외 높은 수준의 인재 유입계획, (8) 전문기술인재의 지식혁신 프로젝트, (9) 높은 수준의 국가인재 진흥계획, (10) 현대농업인재의 지원계획, (11) 변두리 빈곤지역, 국경지역 민족과 혁명지역의 인재 지원계획, (12)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의 기층(基层) 배양 계획.
-

제8편 민생 개선: 기본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완비

민생을 우선적으로 하여 취업, 소득분배, 사회보장, 의료·보건, 주택 등의 보장과 제도적 안배를 개선하고 완비하여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하고 발전성과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한다.

제30장 기본공공서비스 수준의 향상

사람을 근본으로 하고 서비스를 우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정부는 공공서비스 직책 이행, 보장능력 향상으로 도·농 간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격차를 감소시킨다.

제1절 견고한 기본공공서비스 체제의 건립

기본공공서비스의 범위와 표준을 명확히 하고 공공 재정체제를 빠르게 개선하여 기본공공서비스 지출을 보장하고 기본공공서비스의 성과심사와 행정문책을 강화한다. 중앙과 지방의 관리 권한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지방정부를 주체로 통일적인 등급을 나누어 서로 결합된 공공서비스 관리체제를 완비한다.

표 4. '12·5' 시기 기본공공서비스 범위와 중점부문

공공교육: ① 9년제 무상 의무교육, 농촌 의무교육 단계에서 기숙사 제도 학교의 기숙사비 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기숙사 거주 학생은 생활보조금을 제공 ② 농촌학생, 도시·읍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과 농업 전공인 학생에게는 중등직업교육이 무료임, ③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유아, 고아와 장애아동에게 학교 입학 전(前) 교육(유치원 교육)의 보조금을 제공

취업서비스: ① 도·농 노동자에게 무료 취업정보, 취업자문, 취업소개와 노동조정중재를 제공, ② 실업자, 농민공, 장애인 등 새롭게 성장하는 노동력을 위하여 기본적인 직업기술능력 훈련을 무료로 제공, ③ 취업이 어려운 자와 취업률 제로 가정(零就业家庭)⁵⁾에 취업지원을 제공함.

사회보장: ① 도시·읍의 직원과 주민은 기본양로보험을 향유하고 농촌주민은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을 향유한다. ② 도시·읍의 직원과 주민은 기본적인 의료보험을 향유하고, 농촌주민은 신형 농촌합작 의료를 향유한다. ③ 도시·읍 직원은 실업보험, 공상보험, 생육보험을 향유한다. ④ 도시와 농촌의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최저생활보장, 의료구조(救助), 장례구조(救助)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⑤ 고아, 장애인, 5보호(五保戶) 계층, 고령 노인 등 특수한 계층을 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보건: ① 무료로 주민에게 건강당안(健康档案), 예방접종, 전염병예방치료, 아동보건, 임신부보건, 노인보건, 건강교육, 고혈압 등 만성질환관리, 극성정신병관리 등 기본공공위생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에이즈, 폐결핵의 예방치료, 농촌부녀의 임신과 임신초기 염산보충·복용 농촌부녀자의 입원 출산 보조, 농촌 적령 부녀자의 자궁경부암·유선암 검사, 어려운 계층의 백내장 시력회복 등 주요 공공보건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실시한다. ③ 국가의 기본적 약품제도를 실시하여 기본약품이 기본의료보장약품정산목록에 속하도록 한다.

표 4. 계속

인구의 산아 제한 계획: ① 피임 관련 약품과 도구, 임신 전 우량아 출생을 위한 건강검사, 생식건강기술과 교육홍보 등 산아 제한 계획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② 조건에 부합하는 가임 연령 계층에 재출산 기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주택보장: ① 도시·읍의 저소득 가정에 저렴한 주택을 제공한다. ② 도시·읍의 중·하위 소득 가정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공공문화: ① 사회저변에 공공문화, 체육설비를 무료로 개방한다. ② 농촌 전역의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하게 하고 농촌에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며 서적·신문·오락 등 공익성 문화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기초설비: ① 행정촌(村)에 고속도로와 정기 운행 여객차량을 개통하고 도시건설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② 행정촌에 전기가 들어오고 전기가 없는 지역의 인구 모두 전기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③ 우편서비스를 농촌과 촌락마다 이용 가능하게 한다.

환경보호: ① 현(縣)마다 오수, 쓰레기의 환경 무해(無害)화 처리 능력과 환경감독 평가 능력을 구비하도록 한다. ② 도시와 농촌의 식수원 안전을 보장한다.

제2절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혁신

기본공공서비스의 제공방식을 개혁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서비스 구매를 확대하고 제공주체와 제공방식의 다원화를 실현한다. 비(非)기본공공서비스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고 시장진입을 완화하여 사회자본의 다양한 참여를 격려하고 다방면의 공급능력을 강화하여 대중의 다양화된 수요를 만족시킨다.

제31장 취업 우선 전략 실시

취업 촉진을 경제사회 발전의 우선지위에 두는 것을 견지하고 노동자의 자주적 직업선택, 시장의 취업조절, 취업 관련 체제를 더욱 완전히 하고 평등한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취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충분한 취업이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제1절 더욱 적극적인 취업정책 실시

노동집약적 산업, 서비스 산업과 소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취업과 창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한다. 세금비용의 감면, 직장의 보조, 교육(培訓)의 보조, 사회보험보조, 직능평가 보조 등 정책을 개선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생, 농촌 전이 노동력, 도시·읍의 취업이 어려운 사람의 취업을 촉진한다. 소액담보대출, 재정적 할인, 부

5) 도시지역 비농업 호적 가정 중 법정 노동 연령 내에 노동능력이 있는 가정의 구성원이 모두 실업자로 등록되어 단 한 사람도 취업하지 못한 가정을 말함(역자 주).

지안배 등을 개선하여 자주혁신정책을 격려하고 각 계층의 창업이 취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투자와 중대한 프로젝트 건설은 완벽한 취업을 이끄는 체제로 건립한다. 취업의 원조정책을 개선하고 여러 방면으로 공익성 직장을 개발한다. 대외노무협력의 발전을 격려한다.

제2절 공공취업서비스의 강화

통일적 규범이 원활히 적용되는 인력자원시장을 완비하고 도시·농촌의 공공취업서비스 체계를 개선하여 전국적인 취업정보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고효율 취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체 노동자의 직업 훈련제도를 완비하고 직업직능훈련 능력의 배양을 강화한다. 진학을 할 수 없는 금년 중고등학교 졸업생 등의 새로운 노동력은 보편적인 노동 예비제 훈련을 실시한다. 규정된 금액으로 기업의 직원교육훈련경비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직원에 대한 기업의 근무 직능훈련을 유도한다. 창업훈련을 강화하여 장차 창업을 희망하거나 훈련이 필요한 인원을 훈련범위에 포함시킨다. 도시·읍의 실업률 통계 조정을 개선하고 실업을 감독하는 예비경보제도를 구축하여 취업수요를 예측한다.

제3절 노동관계의 화합구축

협력적인 노동 관계를 위한 3자 기구를 완비하여 정부, 공회, 그리고 기업의 역할을 발휘, 기업과 직원의 이익이 향유되는 체계를 형성하여 규범적인 질서합리적 공정상호 이익안정적이고 화합적인 노동관계가 건립되도록 한다. 전면적인 노동계약제도를 추진하고 부단하게 계약의 범위를 확대한다. 전면적으로 단위·노동자비안제도(劳动用工备案制度)⁶⁾를 추진한다. 노동 중개소를 통한 노동파견을 규범화한다.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표준체제를 더욱 빠르게 건설하여 노동정책의 표준관리를 강화한다. 노동쟁의의 해결 기구를 완비하고 노동쟁의의 조정·중재를 강화하여 노동보장의 감찰과 법 집행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제32장 소득분배 관계의 합리적인 조정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각종 분배방식이 병존하는 분배제도를 견지하고 개선하여 1차 분배와 재분배가 모두 효율적이며 공정한 관계로 처리되도록 하고, 특히 재분배는 공정예보다 중점을 두어 합리적 질서의 소득 분배구조가 형성되도록 하며, 주민소득이 국민소득 분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고되도록 노력하여 노동 보수가 1차 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 소득격차의 확대추세를 점차적으로 바로잡는다.

6)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하에 정부의 노동보장행정부문이 사회 관리와 시장 감독을 실시하고 사람을 고용하는 단위(单位)와 노동자에 대한 거시적 관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노동자와 노동이용자(单位) 간의 질서를 규범화하고 노동 계약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노동자와 고용단위 양측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역자 주).

제1절 임금제도 개혁의 심화

시장메커니즘의 조절과 기업의 자주분배, 평등한 협상확정, 정부감독지도의 원칙에 따라 노동력 시장의 수요와 공급, 기업 경제의 효율적인 임금 결정 기구와 성장 기구에 반영되어 형성되도록 한다. 임금지불의 보장체제를 완비한다. 최저임금과 임금지도선 제도를 개선하고 점차 최저임금표준을 상승하여 기업의 급여조사와 정보 공개제도를 건립하고, 적극적으로 적절한 단체교섭권 범위를 확대시킨다. 국유기업의 임금총액관리방법을 개혁하고 일부 업종의 임금총액과 수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업종간 임금 격차를 축소한다. 공무원의 임금제도를 개선한다. 사업단위의 특징에 부합하고 근무처의 성과와 등급분류 관리를 구현한 사업단위의 소득분배제도를 완비한다.

제2절 자본, 기술, 관리 등 요소의 참여분배제도 완성

공개, 공평, 공정한 공공자원의 양도제도를 완비하고 국유지, 해역(海域), 산림, 광산 등 공공자원양도수익을 전(全)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건립하고 양도수익은 주로 공공서비스 지출로 사용한다. 국유자본 수익 중 국가에 납부하는 범위와 비율 모두 확대하고 일률적으로 공공재정에 포함한다. 주식제 기업, 특히 상장회사의 배당금 분배제도를 완비한다. 기술성과는 수입 배분 중에서 배당을 보장받도록 한다. 경영관리성과, 리스크, 책임을 바탕으로 임금을 확정하는 제도를 건립하여 완비하고 국유기업, 국유지주 금융기구 경영관리인, 특히 고위간부의 소득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직무 관련 지출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3절 재분배 조절 메커니즘을 신속히 완비

조세, 사회보장, 이전지출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재분배 조절 메커니즘을 신속히 완비한다. 개인소득세 과세 베이스와 세율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임금·급여소득 비용공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며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조절을 강화한다. 완전한 재산세 제도를 점진적으로 건립한다. 재정지출구조를 조정하고 공공서비스의 지출 비중을 제고하며 사회보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주민을 위한 이전지출 소득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다.

제4절 소득분배 질서 정돈과 규범화

법률법규를 완전히 하고 정부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집행력을 강화하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면서 합리적인 소득분배 질서를 신속히 형성한다. 합법적인 소득을 보호하고 불법소득을 단호히 단절시킨다. 국유기업과 기관사업 단위의 임금 외 소득, 비화폐성 복리 등을 정리하고 규범화한다. 정부의 비세수관리를 강화하여 각종 행정 사업성 비용과 정부성 기금을 정리하고 규범화한다. 소득정보 관리감독 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한다. 소득분배 총괄협력 메커니즘을 건립한다.

제33장 전 도농주민을 포함하는 사회보장체제 완비

보장이 필요한 모든 이가 포함(广覆盖)이 되고, 기본적 생활을 보장(保基本)하며 다층적(多层次), 지속가능(可持续) 방침을 고수하고 도시와 농촌의 주민을 포함하는 사회보장체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며 보장수준을 점진적으로 상승시킨다.

제1절 사회보험제도의 완비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제도의 전 범위 확대를 실현한다. 도시·읍의 근로자와 주민 양로보험제도를 완비하며, 전면적으로 도시·읍 직원의 기본적 양로보험을 성급(省级) 계획으로 구현하며, 기본양로금의 전국적인 계획을 실현하고, 적절하게 도시·읍 근로자의 기본양로보험관계가 직업에도 연결되도록 한다. 점차적으로 도시·농촌 양로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연계를 추진한다. 기관의 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의 개혁을 추진한다. 기업연금과 직업연금을 발전시킨다. 공상보험(산재보험)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보장수준을 제고하여 예방보상·재활치료가 서로 결합되는 공상보험 제도를 완비한다. 실업·생육보험 제도를 완비한다. 상업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발휘한다. 지속적으로 국유자산, 복권발행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전국사회보장기금을 충분하게 하여 신뢰할 수 있는 양로기금의 투자운영을 적극 추진한다.

제2절 사회구조체계의 건설 가속화

도시와 농촌의 최저생활 보장제도를 완비하고 관리를 규범화하며 보호적용을 분류하고, 보호를 해야 한다면 온 힘을 다해 보호한다. 최저 생계비 기준의 동태적 조정 메커니즘을 완전하게 하여 낮은 생계비 기준과 보조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제고한다. 도시와 농촌의 최저 생계비와 최저임금, 실업보험과 빈곤개발 등 구제정책의 연계를 강화한다. 농촌의 5보호(五保护) 계층의 부양 수준을 높인다. 군인·열사 등의 가족이나 상이군인의 직업을 우대하여 돌보는 것을 강화한다. 자연재해 구조작업을 잘 이행한다. 임시 구조제도를 완비하고 최저 생계비 대상자보다 소득이 약간 많은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제3절 사회복지와 자선사업의 적극적인 발전

노인부양·장애자와 고아에게 도움·가난 구제를 중심으로 점차 사회복지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충적 사회복지에서 적절한 혜택을 주는 사회복지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국민복지수준을 점진적으로 제고한다. 가정과 지역사회, 복지기구의 상호 결합을 견지하며 점차 사회복지서비스 체제를 완전하게 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사회화를 추진한다. 장애인, 고아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자선사업을 발전시키고 전 사회의 자선의식을 강화하며 적극적으로 자선조직을 양성하고 공익성 기부에 대해 세수우대정책을 실시한다.

제34장 기본의료보건제도의 완비

기본적인 생활 보호, 사회적 기층의 강화, 메커니즘 건립의 요구에 따라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고 의약보건체제의 개혁을 심화하며 완전한 기본의료보건제도를 건립하고 의료보건사업을 발전시켜 사람들의 기본적 의료보건 수요를 우선 만족시킨다.

제1절 공공보건서비스 체제의 건설 강화

중대 질병의 예방과 통제 등 전문적 공공보건서비스의 네트워크를 완비한다. 1인당 기본 공공보건서비스 경비기준을 점차 높이고 국가의 기본공공보건서비스 항목을 확대하며 중대한 공공보건서비스의 전문적인 항목을 실시하고 전염병, 만성질병, 직업병, 지방병, 정신병을 예방 치료하고, 중대하고 특별한 공공보건사건의 해결능력을 제고한다. 농촌의료 응급치료 네트워크를 건립한다. 건강교육을 보편화하고 국민 건강 행동계획을 실현한다.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70% 이상의 도시와 농촌 주민의 전자(电子) 건강 당안(档案)을 만든다. 임산부 사망률을 22/10만 명으로 낮추고 영아 사망률은 12%로 낮춘다.

제2절 도시와 농촌의 의료서비스 체제건설의 강화

현(县)의 병원을 중점으로 향진(乡镇)의 보건원(卫生院)과 촌(村)의 보건실(卫生室)을 기초로 농촌 3급 의료보건서비스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지역사회의 보건의서비스를 기초로 신형 도시 의료보건서비스 체제를 완비한다. 새로 증가한 의료보건 자원의 중점이 농촌과 도시의 지역사회에 치중되도록 한다. 사회 저변의 종합적인 의료보건기구의 개혁을 추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적 메커니즘을 건립하며 새로운 운행메커니즘을 형성한다. 일반의(一般医)를 중심으로 의료보건팀을 강화하고, 일반의가 장기간 사회기층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정책을 완비하고, 천 명당 일반의가 0.2명이 되도록 한다. 등급을 나눈 진료와 쌍방향 진료제도(双向转诊制度)⁷⁾를 추진하여 각 도시의 병원과 기층 의료기구의 분업적인 협력 패턴을 형성한다. 지역의 보건규획을 완비하고 사회자본의 의료기구 설립을 격려하고 유도하며 다양한 병원을 설립한다.

제3절 의료보장체제 완비

도시와 농촌 주민이 혜택을 누리는 기본의료보장체제를 갖추고, 도시 근로자의 기본의료 보험, 신형농촌합작의료와 도시·농촌의료구제제도를 완비한다. 점차적으로 도시·읍 주민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의 1인당 자원 조달 표준 및 보장 수준을 향상시켜 그 차

7) 소규모 지역사회 의료보건서비스 기구와 상대적으로 큰 구역사회의 중대형 종합병원, 전문병원은 분급진료와 쌍방향 진료제도의 협의를 체결하였다. 자주 발생하는 작은 질병은 지역사회 의료보건기구에서 치료하고 큰 질병은 2급 이상의 큰 병원에서 치료한다. 대형 병원에서는 만성질병 치료, 수술 후 건강회복은 지역사회 의료보건서비스 기구로 옮겨서 할 수 있다(역자 주).

이를 줄이도록 한다. 도시 주민의 의료보험, 신형농촌합작의 최고지불 한도액과 입원비용 지불 비율을 상승시키고, 진료소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각 제도를 잘 연계하여 처리자원을 통합하고, 의료보험 관계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받아들여 의료비용이 타 지역에서도 처리되도록 한다. 기본의료비용은 즉시 지불 가능하도록 하고, 지불방식 또한 개혁한다. 적극적으로 상업 건강보험을 발전시켜 의료보험제도를 보충하도록 한다.

제4절 의약품 공급 보장체제 완비

국가의 기본약품제도를 기초로 하는 약품공급보장체계를 건립하고 완비한다. 기층의료보건기구(基层医疗卫生机构)⁸⁾에 국가의 기본약품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기타의료보건 기구는 전면적인 배치와 기본약품의 우선 사용을 실현한다. 기본약품의 목록을 동태적으로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건립하고 가격형성 메커니즘과 동태적인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기본약품의 실제 사용경비 청산수준을 제고한다. 약품의 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약품의 유통질서를 정리하며, 의료기관의 약품 집중 구입과 합리적인 약품 사용을 규범화한다.

표 5. 의료보건 중점 프로젝트

01 기본의료 보장체제

도시와 농촌의 기본의료보험 가입률을 상승시키고 자금조달과 보장능력을 높여 모든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기본의료보장을 실현한다.

02 공공보건서비스 체계

보건감독, 정신보건, 농촌의 응급조치 등 전문보건서비스 기구의 기초설비조건을 개선한다.

03 의료서비스 체계

기층의료보건기구의 표준화 건설을 추진하고 현(县)급 병원(중의병원 포함)의 서비스 능력을 향상하고 성(省)급 모자병원(妇儿专科医院), 변경지역의 도시급 종합병원, 현(县)급 중의원의 건설을 강화한다.

04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배양기지

표준화된 일반의 양성기지를 건설하고 근무부서 이동이나 규범화된 훈련을 통하여 15만 명의 일반의를 양성한다.

05 의약보건 정보화

기층의료보건 정보화의 건설을 추진한다. 3급 병원과 현급 병원은 원격진료 시스템을 건설하고 공립병원은 정보화 건설을 강화한다.

8)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장 작은 행정구역에 설치된 의료기구로 이전에는 향진 1급(乡镇 1级)의 보건소(卫生所) 혹은 보건원(卫生院)이 있었고 현재의 기층은 광의적으로 말하면 현(县) 1급의 의료기구와 소형 지역사회 의료구제 중심을 가리킨다(역자 주).

제5절 공립병원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

공립병원의 공익성을 견지하고 '정부와 사업단위의 분업(政事分开), 부문 간의 관리와 감독 분업(管办分开), 의약분업(医药分开), 영리성·비영리성분업(营利性和非营利性分开)'의 유효한 형식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현대적 병원 관리 제도를 추진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고용체제와 분배제도를 건립한다. 공립병원의 보상체제를 개혁하고 지불방식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환자를 중심으로 공립병원의 내부 관리를 개선하고 서비스과정을 최적화하여 진료를 규범화하고 병원에서의 진찰이 편리하도록 한다. 여러 지역에서 의사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Resident Doctor의 배양제도 규범화를 건립한다. 의무요원(medical affairs staff)의 적극성을 중시한다.

제6절 중의약(中医药) 사업의 발전 지원

중의학과 서양의학을 모두 중시하고 중의학의 의료와 예방 보건서비스를 발전시켜 중의학의 계승과 혁신을 추진하고 민족의약의 발전을 중시한다. 중의 의료기구와 중의약의 인재 집단 건설을 강화한다. 중의약 자원 보호, 연구개발과 합리적 이용을 강화하고 질적 인증과 표준 설립을 추진한다. 의료보장정책과 기본약품정책이 중국 의약서비스의 제공과 사용을 유도하도록 한다.

제35장 주택보장수준의 제고

정부의 통제와 시장조절의 결합을 견지하고 국가의 상황과 부합하는 주택체제 메커니즘과 정책체제를 완비하고 총량의 기본적인 균형, 합리적인 기본구조, 부동산 가격과 주택의 수요, 공급 패턴에 기본적으로 적응된 소비능력을 형성하여 많은 사람들의 주택보유를 실현한다.

제1절 주택공급체계 완성

기본수요보장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이끌고 정부 위주의 기본보장 제공, 시장 위주의 다양한 수요 만족이라는 주택공급체계를 신속히 조성한다. 주택난을 겪고 있는 도시지역 저소득층 가정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제도를 실시한다. 주택난을 겪고 있는 중소득층 가정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보장을 실시한다. 고소득층 가정에 대하여 임대와 분양주택이 상호 결합된 제도를 실시한다. 경제, 적용, 환경보호, 자원절약의 주택기준체계를 건립하여 완성하고 국정에 부합한 주택소비 모델을 창도한다.

제2절 보장성 주택공급 확대

각급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장성 주거안정 공정 건설역량을 확대하며 보장성 주택공급

부족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임대주택 등 부동산을 확보하고 임대 보조금 제도를 완비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점차 보장성 주택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각종 판자촌 개조를 가속화하고 서민주택을 규범화하고 발전시킨다. 안정적인 투자 메커니즘을 건립하고 재정자금, 주택공적금 대출, 은행대출의 지원력을 강화하여 사회 역량이 보장성 주택건설 운영에 참여하도록 이끈다. 보장성 주택관리를 강화하며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보장성 주택 분배정책을 제정하고 절차를 감독·관리하며 진입과 퇴출관리, 임대비용 기준을 엄격히 규범화한다.

제3절 부동산 시장 통제 개선

지방정부 책임제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기본주택보장, 부동산 가격안정, 시장 감독·관리 강화를 각 지역 경제사회 발전의 수행목표에 포함시키고 성급 인민정부에서 총 책임을 지고 시와 현급 인민정부가 직접 책임을 진다. 토지공급정책을 완비하고 주택용지의 총 공급량을 증가시키며 보장성 주택용지를 우선하여 안배하고 보통 분양 주택공급을 효율적으로 확대한다. 차별화된 주택 신용대출과 조세정책을 완전히 하고 자가 거주와 주택 거주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를 합리적으로 유도하며, 투기와 투자성 주택 구매를 효율적으로 억제한다. 기본주택보장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도시부동산관리법 등 관련 법률법규를 수정, 완비한다. 주택공적금 제도를 완비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참여범위를 확대한다. 시장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규범화한다. 주택정보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하고 정보공시제도를 완비한다.

제36장 인구 업무를 전면적으로 잘 이행

총 인구수를 통제하고 인구의 자질을 높여 인구구조를 최적화하고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제1절 산아제한 계획서비스 강화

산아제한 기본정책을 고수하고 정책을 점진적으로 완비한다. 산아제한가정 우선혜택정책 체계를 완비하여 가정발전 능력을 제고한다. 산아제한가정 장려보조금, “자녀수가 적을수록 행복하다(少生快富)”는 프로젝트 장려금, 특별보조금의 기준을 제고하고 범위를 확대하면서 동태조정 메커니즘을 건립한다. 인구와 산아제한서비스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비스 범위를 확장한다. 출생인구 성별의 불균형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한다. 출생 결함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교육, 건강한 아이 출산 자문, 위험성 높은 그룹(당뇨, 고혈압 등) 지도, 임신 전 검사, 영양소 보충 등 서비스를 잘 이행하며 출생결함발생률과 농촌 5세 이하의 느린 성장률을 감소시킨다. 유동인구 산아제한서비스 관리를 강화한다.

제2절 여성의 전면적인 발전 추진

남녀평등 기본 국책을 이행하고 여성발전개요를 실시하여 여성 인력자원을 전면적으로 개발하고 여성의 합법적인 권익을 철저히 보장하며 여성 취업·창업을 추진하여 여성의 경제발전 참여와 사회관리 능력을 제고한다. 여성의 노동보호, 사회복지, 위생보건, 가난탈피, 법률원조 등 임무를 강화하고 성별 통계제도를 완비하며 여성발전환경을 개선한다. 여성폭력, 여성침해, 인신매매 등 위법범죄 행위를 엄격히 처벌한다.

제3절 아동우선발전 보장

아동우선원칙을 고수하고 아동발전개요를 실시하며 법에 따라 아동의 생존권, 발전권, 보호받을 권리,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성장 환경을 개선하며 아이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여아에 대한 차별을 없애 아동 심신의 건강발전을 추진한다. 영유아 기초 조기교육과 독생자녀 사회행위 교육을 강화한다. 경제적 사정으로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아동, 고아, 장애아와 불량 미성년자 구제 등의 문제를 철저히 해결한다. 아동 인신매매, 아동 유기 등 위법범죄 행위를 엄격히 처벌한다.

제4절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처

주택 거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기구를 버팀목으로 한 노인부양서비스 체계를 건립한다. 사회 노인부양서비스를 신속히 발전시키고 고령화 사업과 산업을 육성하며 공익성 노인부양 서비스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사회자본의 노인부양서비스 기구 설립을 장려하며 노인 천 명당 노인부양 침대 수 30개를 보유하도록 한다. 노인부양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기본생활보호에서 의료건강, 보조의료기구 배치, 정신위안, 법률서비스, 긴급구조 등의 방면으로 확대한다.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활동장소와 편리화 시설을 확충한다. 노인 인력자원을 개발 이용한다.

제5절 장애인 사업발전 가속화

장애인 사회보장체계와 서비스체계를 완전히 하고 장애인 생활과 발전을 위하여 안정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한다. 재활과 요양위탁 프로젝트, 0~6세 장애아동 응급처치·재활 프로젝트, '阳光家园' 계획을 실시하고 장애인 모두가 재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장애인 취업서비스와 취업 훈련을 적극 전개한다. 농촌 장애인에 대한 생산보조와 생활구조 역량을 확대한다. 장애인 문화체육생활을 풍부하게 한다. 보조기구적용체계를 조성하고 무(無)장애 건설을 추진한다. 국가 장애인 행동예방 계획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장애인의 발생과 발전을 효율적으로 통제한다.

표 6. 민생행동계획 개선

도시와 농촌 취업규모 확대: 도시지역은 연평균 900만 명의 일자리 창출, 연평균 800만 명의 농업노동력 이전을 실현한다. 기업 노동계약서 체결률이 90%에 이르도록 하며 집체(集体) 계약서 체결률이 80%에 이르도록 한다.

최저임금기준 제고: 최저임금기준은 연평균 13% 이상 증가시킨다. 대다수 지역의 최저임금기준이 현지 도시와 읍에서 종사하는 이들 평균 임금의 4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양로보험수준 제고: 도시와 읍의 근로자 기초양로금은 전국통합을 실현한다. 도시와 읍에서 1억 명이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도시와 읍 근로자의 기본양로보험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도록 하며 도시와 읍의 60세 이상 비취업 주민이 기초양로금 혜택을 받도록 한다. 신형농촌사회 양로보험제도가 전 지역에서 실시되도록 하며 기초양로금 수준을 제고한다.

의료보험수준 제고: 도시와 농촌 3개 항목 기본의료보험 가입자가 6,000만 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 도시와 읍 주민의 기본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에 대한 재정보조금 기준을 점진적으로 제고하며 정책범위 내의 의료보험기금 지출수준이 7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도시와 농촌 최저생계비 기준 제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연평균 10% 이상 확대한다. 농촌 빈곤인구 감소, 빈곤구제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빈곤구제 기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빈곤인구를 현격히 감소시킨다.

주민 세부담 경감: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초반 개인소득세 임금·급여소득의 비용공제기준을 제고하고 개인소득세를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중 후반 종합과세와 분류과세가 상호 결합된 개인소득세 제도를 건립하여 완전히 한다.

도시지역 보장성 주거안정 프로젝트 실시: 도시지역 보장성 주택을 건설하고 판자촌 주택 3,600만 채를 개조하며 전국 보장성 주택 보급률이 약 20%가 되도록 한다. 토지양도 순수익이 보장성 주택 건설과 각종 판자촌 개조에 사용되는 비율이 최저 10%가 되도록 한다.

취업과 사회보장서비스 체계 완비: 공공취업, 사회보험, 노동감찰, 조정중재 등 서비스 시설 건설을 강화한다. 사회보장 다기능카드(一卡通) 사용을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보장카드 발급 수량이 8억 장이 되도록 하여 보급률이 총 인구의 60%가 되도록 한다.

국유자본수익 중 민생지출 사용 확대: 국유자본수익 중 국가에 납부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국유자본수익 중 국가납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며 새로 증가된 부분은 사회보장 등 민생지출에 이용한다.